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국내 금융위기이후의
은행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설영화

국내 금융위기이후의
은행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Banks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200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설영화

국내 금융위기이후의
은행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노경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을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설영화

설영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 대학교 교수 _____

위 원 조선 대학교 교수 _____

200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 2장 금융 · 외환위기	5
제1절 금융 · 외환위기의 개요	5
1. 금융 외환위기의 의미	5
2. 금융 ·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와의 관계	5
제2절 금융 · 외환위기의 발생	6
제3절 금융 · 외환위기의 원인	7
제4절 금융 · 외환위기의 극복과정과 대책	10
1. 위기의 극복 과정	10
2. 위기에 대한 대책	11

제 3장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고찰	13
제1절 금융구조조정의 의의	13
제2절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	13
1. 금융구조조정의 개념	16
가. 응급조치 및 기반 조성기(1997년 11월~1998년 3월)	16
나. 제1단계 구조조정기(1998년 4월~2000년 8월)	17
다. 제2단계 구조조정기(2000년 9월~현재)	18
제 4장 우리나라 은행구조조정	20
제1절 은행구조조정 배경	20
1. 1997년 말 금융상황	20
2. 은행구조조정의 필요성	22
제2절 은행구조조정의 추진	23
제3절 은행산업의 변화	26
제4절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작업	27
1. 제 1단계 은행 구조조정	28
가. 제일·서울은행	28
나. 5개 퇴출은행	29
다. 7개 조건부승인 은행	30

라. 97년 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초과 은행	32
2.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33
제 5장 은행구조조정정책 평가	34
제1절 부실은행 정리	34
1. 부실은행 정리방식	35
2. 부실은행의 해외매각	37
제2절 건전성 제고	40
1. 부실채권 정리방식	40
2. 부실채권 규모	43
제3절 수익성 제고	48
1. 주요 경영지표	48
2. 수익의 지속성	51
제4절. 효율성 제고	52
제5절 시장 친화적 금융관행	55
제6절 종합평가	58

제 6장 결 론	61
제1절 맺는말	60
제2절 향후 연구과제	64
참고 문헌	68

표 목 차

<표 1> 1997년 금융 . 외환위기의 원인	8
<표 2> IMF 개혁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1
<표 3>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8
<표 4> 은행대출 추이	22
<표 5>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25
<표 6>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현황(1997.11~2007.3)	25
<표 7> 구조조정 이후의 은행산업의 변화	27
<표 8> 제1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 내용	31
<표 9>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실적	35
<표 10> FDIC의 손실공유 형태의 은행정리 현황 (1991-1993)	39
<표 11> 부실채권 정리의 국가 간 비교	41
<표 12> 워크아웃기업의 채무재조정 및 자금지원	42
<표 13> 워크아웃의 진행	42
<표 14> 상장기업의 부실채권규모 추이	45
<표 15>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여신건전성	48
<표 16> 금융업종별 여신건전성 현황	49
<표 17>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ROA 및 ROE 추이	50
<표 18> 미국의 기업정리 소요시간	58
<표 19> 미국의 은행대출 회수율	58

그림목차

<그림 1> 금융기관 부실채권 잔액 추이	44
<그림 2> 상장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비중	46
<그림 3> 기업부문의 부채 추이	47
<그림 4> 1인당 산출물 추이	53
<그림 5> 점포당 산출물 추이	53
<그림 6> 국내은행 산업의 경쟁력 평가	60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Banks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Seol, Young-Hwa

Adviser : Prof. Park, Ro-Kyung,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utline and analyze the bank reconstruction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by reviewing the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crisis, bank M&A and evaluating how the government policy has worked about the reconstruction of banks using published literatures and data from internet.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the Korean government began a two-stage financial restructuring. In the first stage, two banks were nationalized for later sale to foreigners, five insolvent banks were closed and then merged with blue-chip banks, foreign capital injections were given to seven banks, and public funds were used to normalize operations of the

remaining surviving banks. Korean banks responded with cost reductions and the fastest disposal rate of non-performing loans among the Asian countries suffering the currency crisis. The second stage of restructuring was focused on restoring bank profitabilit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were created to make merger and acquisition easier and help banks realize scale economies.[Park and Weber(2006), p.2374].

This thesis consists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outlines the purpose ,range of study, the method and the brief contents.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have inquired about an outlin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a progress of reconstruction of Korean bank. The fifth chapter evaluates the government policy of reconstruction of bank, after outlined the background, necessity and progress of reconstruction in the fourth chapter. And then the sixth chapter draws the conclusion.

The results of Korean government's policy evaluations on the bank reconstruction are as follows.

First, P&A(purchase and assumption transaction) and government-assisted mergers and selling the bad banks to foreign capitals are successful to deal with bad bank problems.

Second, quick and dirty approach for bad credits has resulted in improving the bank soundness.

Third, balance sheets restructuring of banks have enhanced the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Fourth, the extreme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market has urge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banks to introduce the market-friendly policy.

The limitation of this thesis is that the empirical analysis for the subject was not conducted to judge the improvement level of bank and financial reconstruction.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1960년대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은행경영을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경쟁여건이 제대로 조성될 수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는 은행산업의 경쟁여건을 향상시키고자 1980년대부터 민영화와 신규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시작 하였다. 한일은행이 1981년에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이 1982년에 민영화되었다. 조흥은행은 그 다음해인 1983년에 민영화 되었고, 동기간에 신규진입규제완화(deregulation)로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이 해외자본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외환은행이 민영화 되었으며, 동년에 동남은행과 동화은행이 개점하였다. 1991년에는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설립되었으며 1992년에는 평화은행이, 그리고 1994년에는 국민은행이 설립되었다. 마지막으로 1997년에는 주택은행이 민영화되어 1997년 현재 26개의 일반은행이 존재하였다.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 유례없는 충격과 파급효과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히, 전염현상(contagion effect)은 속도와 전염의 폭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주변 국가들을 빠르게 감염시켰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를 전염시킨 뒤 대만과 홍콩을 거쳐 한국을 외환위기에 빠뜨렸다.

한국은 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한국정부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단기차입금의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유동성조절을 위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1997년 11월 22일 IMF 구제자금

을 공식요청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고도성장 이후 경제위기는 1972년, 1980년, 1989년, 그리고 1997년으로 네 차례에 걸쳐 약 8~9년의 주기로 나타났다. 경기의 주기적 반복 과정에서 불경기를 맞이하는 것은 상품생산을 하는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는 외환유출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에 의해 야기되었으나, 이것이 금융위기와 나아가 경제위기로 발전되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은행의 부실자산을 낳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의 잘못된 관행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의 부재를 가져왔다고 보여 진다.

이는 1990년대에 초에 시작하여야 할 금융개혁을 정치논리에 의한 금융기관의 증설 및 해외에도 동남아 등에 은행, 증권, 리스사, 중금사 등의 지사를 지나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관리도 미숙하여 금융의 질적 운영 보다는 외형에 지나친 한편,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금융개혁법마저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으로 무산된 바도 본 위기의 오래된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금융부문에서 먼저 나타나는데다가 한국은 특히 금융부문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였다.¹⁾

금융부문 구조조정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금융 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감히 부실 금융기관을 퇴출시켰다. 14개 중금사, 2개 증권사 및 1개의 투신사가 우선적으로 퇴출 되었고, 1998

1) 구분성, "국내은행의 성장성과 국제화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8. 8, pp.12-15.

년 6월 2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5개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던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중에서 은행산업에 대하여 개관하고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정책이 과연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는지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경제성장과 함께 양적으로는 급팽창하였다. 즉 1960년대의 개발경제체제의 확립과 은행제도정비기간(1962-1971년),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금융다변화정책기간(1972-1997년)을 거치면서 시중은행의 자산규모를 보면 1960년 말 199억 원에서 2000년 말에는 505조 8872억 원(은행계정)에 달함으로써 지난 40여 년간 매년 28.8%씩 25.307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자생적 발전이 제약되어 질적 성장은 이에 못 미치는 불균형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결과 1997년의 금융위기는 예견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8년 6월 29일에 5개 부실은행이 퇴출 조치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98년 초 부실이 심각한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감자명령을 내리고 해외매각을 추진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은행들을 합병, 증자, 외자유치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였다. 지난 3년간의 은행권 구조조정으로 국내 은행산업은 양적, 질적으로 대변혁을 경험하였다. 현재까지 11개 은행이 퇴출, 피합병되는 등 유례없는 외형상 변화를 겪었다.²⁾

즉, 5개 은행 퇴출, 5개 은행 피합병, 1개 은행 해외매각 되었다. 은행구조조정으로 과거 고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되어온 비효율을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2) 노철우, “금융·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예금보험공사」, 2002. 12, p.5.

등 은행내부 시스템과 관행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외자유치, 시장개방 등으로 국내 은행산업에 외자계가 급부상 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금융위기이후 현재시점에서 은행의 구조조정 성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론적,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 외의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조사, 학회 등의 발표 자료를 참고로 하는 문헌연구방법과 함께, 시사성이 있는 논제이므로 인터넷검색자료를 함께 이용하였다.

즉,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제2장, 제3장에서는 금융·외환위기의 개요, 발생 및 원인, 극복과정과 대책,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금융구조조정 중 은행구조조정의 배경, 필요성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제5장에서는 은행구조조정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제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제 2장 금융 · 외환위기

제1절 금융 · 외환위기의 개요

1. 금융 · 외환위기의 의미

넓은 의미의 금융위기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외환 위기나 은행위기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특정위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³⁾

우선 외환(통화)위기(currency crisis)란 특정통화의 가치에 대한 투기적 공격으로 인해서 통화가 급격히 평가절하 되거나 또는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은행위기(bank crisis)란 예금인출사태나 은행파산상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신규투자를 중지하게 되거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편 외채위기(foreign debt crisis)란 특정 국가가 다른 외국 국가나 민간금융부문의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2. 금융 ·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와의 관계

1997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가 처했던 경제 상황을 ‘외환 · 금융위기’ 대신에 ‘경

3) 노철우(2002,12), 상계논문, P. 5.

제 위기'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⁴⁾ 외환 . 금융 위기와 경제위기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의 개념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를 종합 하면 “경제위기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또는 예상한 것과는 다른)경제현상이 발생하여 경제주체들이 이례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 경제시스템 전체가 와해 또는 붕괴될 수 있는 상황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는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제상황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실제로 사용 되고 있는 위기라는 말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유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위기가 발생하는 부문에 따라 유통위기, 산업위기, 은행위기, 금융위기, 증권파동, 외환위기, 외채위기, 국제수지위기, 재정위기 등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공급위기, 수요위기, 제도적 위기, 정책적 위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 위기는 금융 . 외환위기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금융 · 외환위기의 발생⁶⁾

1997년도에 들어서 우리 경제는 한보철강 등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함께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외자유입 부진 등으로 외환보유액의 줄어들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에 들어 기아사태의 처리지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 등이 겹치면서 월 경제의 건전성에 대

4) 재정경제부 · 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 백서」, 2000.9, pp.9-16.

5) 노철우(2002.12), 전계논문, p.11.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6.6, p.p.554-562.

한 해외투자자의 불신이 높아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로 돌아서고 국제금융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금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10월 하순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홍콩 주가 폭락의 영향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도가 더욱 저하되어 국내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은행의 긴급 외화자금 지원이 불가피하여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외환결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와의 협의를 거쳐 12월 3일 21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 협정을 체결하였고,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100억 달러 및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23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였다.

제3절 금융·외환위기의 원인

1997년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즉 IMF는 대기업 연쇄부도, 금융기관 부실, 대외여건 악화, 정책적 과오 및 시장 신뢰도 상실⁷⁾을 들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대기업 부실 등 내부결함 누적, 경쟁력 강화 시스템 개혁 등 근본적 대책 미흡(개혁입법 실패 등), 동남아 외환위기 전염, 리더십 약화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1)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취약한 재무구조, 2) 금융기관의 부실 누적과 느슨한 여신관리, 3) 대외균형을 이루기 위한 적기대응의 미흡, 4) 자율화과정에서의 금융 감독의 소홀, 5) 개혁정책의 추진 지

7) 이종규, 「IMF/IBRD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 금융경제총서 2000-1,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0. 11, p.52.

연, 6)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미정착과 도덕적 헤이의 심화 등으로 보고 있다.⁸⁾

1997년 금융 . 외환위기의 원인은 위의 주장들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1월 하순 이후 우리나라 언론 등에서 거론했던 원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1997년 금융 . 외환위기의 원인⁹⁾

구분	원 인
해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국가의 외환위기의 전염 ·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일본식 경제운용체제에 대한 의구심 확산 · 미국경제의 호조 · 세계화의 진전 ·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서구의 비판 · 한국경제의 부정적 측면 부각
기업 및 실물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 소유와 경영의 비분리(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 · 외형성장을 중시하는 기업경영풍토 · 정경유착 · 소수 산업 의존적 산업구조 · 중소기업기반의 취약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임금의 지속적 상승 · 경기 둔화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무리한 경기조절 정책
금융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치금융(금융기관의 자율성 부족) · 동질적 금융기관 업무 · 금융권간 비대칭적 금융규제 · 감독미비 · 직접금융시장의 낙후

8)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 백서」 2000.9, p.p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기간불일치 · 전근대적 금융관행 · 국제 금융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해이
외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미발표 · 외환보유고 전용 · 과도한 단기외채 ·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미진 · 환율의 경직성 · 민간경제주체들의 달러 사재기
정치부문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 · 재정경제원의 비대화 · 관료사회의 무사안일 ·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권의 조정능력 상실 · 민족주의적 태도 · 각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이기적 행동 · 과소비 및 저축의식 약화
정책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모순적 정책의 집행 · 시장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적 태도 · 국제금융기구나 외국과의 협조 부족 · 실효성 없는 정책의 남발 ·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 감행 ·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미비점 보완 부족 · 선부른 자유화, 국제화 정책 혹은 자유화의 미진 · 통화정책의 부재 ; 통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여건미비 · 경제통계의 현실성 결여 · 경제전망의 오류

9) 이종규, “경제위기 ; 원인과 발생 과정”, 「금융 경제총서 제2호」,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1.11, p.212.

제4절 금융·외환위기의 극복과정과 대책

1. 위기의 극복 과정¹⁰⁾

1997년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8년 1월 해외채권 은행들과 국내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 연장에 대한 기본 원칙에 합의 하여 4월 217억 달러의 단기외채를 정부 보증 하에 만기 1~3년의 신규 채무로 전환하였으며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1998년 중 총 41억 달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말 모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채권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1998년에는 주식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한편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 허용, 외국인 투자업종의 개방폭 확대, 국내 부동산 취득 자유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정부는 IMF 자금 지원에 따른 정책준수사항(후술하는 “대기성차관 협정문” 참조)이며 금융·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 금융기구 등으로부터의 자금유입, 외채만기 연장, 국제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착실히 진행되면서 위기가 수습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실물경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06.6), 전게서, pp.555-556, pp.562-570.

2. 위기에 대한 대책

1997년 금융, 외환위기에 대한 대책의 기본 골격은 IMF와 협의 하여 체결한 대기성차관 협정문(stand-by agreement, 일명 의향서, letter of intent)에 의해 형성되었다. 동 협정문은 1997. 12. 3 체결된 이후 총 8차 (제1차 1997.12.3, 제2차 1997.12.24, 제3차 1998.1.7, 제4차 1998.2.7, 제 5차 1998.5.4, 제6차 1998.7.24. 제7차 1998.10.27, 제8차 1999.3.10) 에 걸쳐 그 내용이 작성.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주요수룩내용은 거시경제정책, 금융개혁 및 금융구조조정, 건전성규제 및 감독, 중소기업지원, 무역 및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및 구조조정 노동시장개혁, 구영기업 민영화, 정보의 제공, 정책준수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계은행(IBRD)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도입관련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제6차 의향서에 첨부되었다.

<표2> IMF 개혁프로그램의 주요내용¹¹⁾

	부 문	정 책 내 용
거시 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M3,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설정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축소
구조 조정 정책	금융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스템의 건전화, 투명화,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무역· 자본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접적으로) 개선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파산 관련법 개선, 구제금융 배제
노동시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하고 원활화 -인력 재배치 등 실업대책 마련

위대책의 주요 내용(경제개혁 프로그램)은 거시적 안정화정책과 미시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거시적 안정화정책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수요를 억제하는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switching policy)을 택하여 금리를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환율을 시장상황에 맞추어 상승하도록 용인하였다.

한편 미시적 구조조정정책은 각 부문 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데,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의 확충,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정리, 무역 . 자본자유화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등이 그 주요 골자였다.

11) 이종규, 전계논문,(2001.1), p.52.

제 3장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고찰

제1절 금융구조조정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란 동일한 조직체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기관, 금융 산업, 금융시장 등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구조개편을 해 나아가는 작업을 뜻 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 차원에서의 금융구조조정은 부실채권 및 부실회사 정리, 자본 확충, M&A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과 함께 소유 . 지배구조, 경영전략, 인사 . 조직, 마케팅,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금융시장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은 회계 및 공시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 자본시장의 자율성 및 책임성 증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건설하게 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¹²⁾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회생 가능한 금융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관련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건전성 . 신뢰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

일반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으나, 금융기관의 파산은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된다.¹³⁾ 일부 금융기관

12) 허재성·유혜미(2002.5), 전계서, p.17.

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융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서 급격한 예금인출사태를 발생시켜 지급 준비금 부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한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결제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한편, 주가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공황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업의 무분별한 과잉투자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되는 반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기업의 과잉투자를 부추겨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키는 등 금융위기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는 상호연관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인 기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경제의 핏줄이 되는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된다.¹⁴⁾

그리고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려 하기 때문에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리구조가 왜곡되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해치게 된다. 따라서 건전한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을 계속 존속시킬 경우 거래기업의 부도, 고객의 예금인출 등으로 지급불능상태가 이르게 되면서 금융기관 전체의 예금인출사태를 가져와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는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¹⁵⁾

금융구조조정은 주로 부실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므로 우선 부실금융기관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1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기관 주주 및 예금자의 손실,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장 초래, 금융시스템의 위기 초래, 금융경색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기업활동 위축, 사회적 불안 및 경제적 혼란 야기, 납세자의 부담 가중, 국가 신인도 하락, 국제적인 금융위기 초래 등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은행부, 「부실은행 정리유형 및 주요사례」, 업무참고자료 98-1(1998.6), pp.4-6. 참조.

14) 노철우, 전계논문, (2002.12) p.33.

15)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2.12, p.33.

하 “금산법”이라 함) 제2조 제3호는 부실금융기관(problem bank, failed bank)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¹⁶⁾

1) 경영 상태를 지켜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도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 또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되어 있는 금융기관

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의 지급이나 차입금 의 상환의 어렵다고 금감위 또는 예금보험공사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금융 기관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금감위에 의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대상이 된다(동법 제10조). 즉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금감위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무 상태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수준별로 일정한 경영개선을 위한 권고 . 요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수준별로 일정한 경영개선을 위한 권고 . 요구 또는 명령을 발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¹⁷⁾

16) 금산법상의 부실금융기관에 관한 정의는 예금자보호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17) 금산법 제 10조 제2항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으로서 1)금융기관 및 임 .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 조직의

1. 금융구조조정의 개념¹⁸⁾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상황은 정부가 IMF 등과의 합의를 반영하여 수립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크게 응급조치 및 기반조성기(1997년 11월~1998년 3월), 제1단계 구조조정기(1998년 4월~2000년 8월), 제2단계 구조조정기(2000.년 8월~현재) 등 3시기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가. 응급조치 및 기반 조성기(1997년 11월~1998년 3월)

정부는 외환. 금융위기 발발 직후 극심한 유동성 부족 상황이 지속되던 청솔, 대한 등 14개 종합금융회사, 고려. 동서 등 2개 증권회사 및 1개 투자신탁회사(신세계 투자신탁)를 우선적으로 퇴출하고, 채권발행(14조원), 재정자금 등으로 22.6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퇴출종합금융회사의 예금대지급, 부실채권매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은행의 자본 확충 지원에 사용하는 등 응급조치적 성격의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¹⁹⁾, 예금보험공사화 한국자산관리공사등 부실금융기관 처리기구의 기능 확충,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구조조정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기타 위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18) 김성훈·김우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 p.32.

19) 1997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위(1998년 4월) 및 통합 금융감독원(1999년 1월)을 설립하여 금융기관 부실판정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전담하게 하였다.

나. 제1단계 구조조정기(1998년 4월~2000년 8월)

정부는 1998년 4월 14일 IMF 등과의 합의를 거친 경제개혁프로그램을 구체화한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동 방안에 따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융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을 50조원(1997년 11월~1998년 3월중 채권발행자금 14조원 포함 시 64조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예금보험 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하여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1998년 6월 회생이 불가능한 5개 부실은행(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을 퇴출하고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을 추가 퇴출하였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정리와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 경기의 급속한 상승 등으로 구조조정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대우그룹의 워크아웃(1998년 8월), 일부 부실 금융기관의 매각지연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졌다. 특히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 대지급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우그룹여신 57조원(1999.8.26 기준)중 약 31.2조원의 금융기관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공적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자금, 이미 사용한 공적자금의 회수 등으로 32조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1998년 4월~2000년 8월중 전체로는 총 82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구조조정에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경영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외환자유화 촉진 등을 위한 관련 법규를 꾸준히 정비하였다.

다. 제2단계 구조조정기(2000년 9월 ~ 현재)

2000년 들어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 지속, 일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우 계열사 등 일부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무산,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충격요인이 더해짐에 따라 경제위기감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04.6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부실채권정리 등이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9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을 발표²⁰⁾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채권발행 등으로 5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및 자본 확충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은행은 지원 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함과 아울러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은 꾸준히 정리하기로 하였다.

<표3>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2006년 2월말, 단위; 개,%)

금융권별	97년 말 총기관수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현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0	-	15	45.5	1	19
비은행	2070	163	170	526	859	41.5	99	1310
총금	30	22	7	-	29	96.7	1	2

20)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1) 잠재부실 요인의 조기정리를 통한 건전성 회복 2)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software 개혁을 통해 시장중심 구조조정 기반 조성. 3) 미래지향적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증권	36	5	7	3	15	41.7	18	39
보험	50	10	6	4	20	40.0	20	50
투신	32	7	5		12	37.5	26	46
상호저축 은행	231	106	28	1	135	58.4	14	110
신용협동 조합	1666	2	115	517	634	38.1	13	1045
리스	25	11	2	1	14	56.0	7	18
합계	2103	168	180	526	874	41.6	100	1329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신용 위험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기업을 계속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희생 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제하고 회사정리법 등을 개정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하였다.

제 4장 우리나라 은행구조조정

제1절 은행구조조정 배경

1. 1997년 말 금융상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해온 이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11위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모범국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비민주적 시장질서가 만연하였고, 경제전반에 대마불사(大馬不死)적인 경영 행태와 도덕적 헤이의 심화로 구조적인 부실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지난 1997년 말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라는 「IMF 외환위기」로 현실화하게 되었다. 21)

외환위기의 징후는 우선 경상수지의 누적적인 적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내수확대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1996년에는 230억불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 한보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외환위기의 가장 중심적인 촉발요인이 되었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에 이어 3월 삼미그룹, 4월 진로그룹, 5월 대농그룹이 부도가 났고, 7월에는 마침내 국내 7위의 기아그룹이 도산하고 말았다. 1997년 당시 3:0대 재벌의 절반이 부도가 나거나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재벌의 도산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무수한 중소기업도 연쇄 도산하거나

21) 허홍, 『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2, pp.12-19.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1999년 7월 도산한 대우그룹도 당시 이미 실질적인 파산상태였으며, 현대그룹도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상태였다.

거대 부실채벌의 연쇄도산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일부 주요은행을 포함 다수의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지급불능사태 또는 도산 사태에 직면하였다. 조흥, 상업, 한일, 제일, 서울, 외환등 대형시중은행, 동남, 동화, 대동 등 후발 신설은행, 대부분의 지방은행이 대규모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은행뿐 아니라 종금사, 생보사, 금고,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 리스사의 경우도 상당수가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정리대상이 되었고, 그 외 거의 대부분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이어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대거 회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결국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애로는 점증하게 되었다.

또한 1997년 1월 한보사태 발생이후 제일은행을 위시한 일부 은행권에 외화부족현상이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남아지역의 외환 위기는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해 7월 국제투기 자본의 태국 바트화투매현상이 발생한 이후 외환위기가 동남아 전체로 확산되었는데 10월에는 인도네시아의 IMF지원 요청이 있었고, 홍콩 중시도 폭락하였으며, 대만의 환율방어 포기선언 등도 잇따랐다.

동남아 외환위기로 우리의 해외차입이 전면 중단되었고, 외환자금의 이탈도 가속화하여 외채의 만기 연장을 이 1997년 11월에는 59% 까지 하락하였다. 10월 이후 정부는 모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사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²²⁾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정부의 위기

22)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5.11, pp.12-14.

대처능력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회수, 외채만기연장 거부 등이 본격화되었고, 일부 금융기관은 외화부도사태에 직면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부족한 외화결제자금을 외환보유고로 공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여 1997년 말에는 고갈상태에 직면했고 환율은 급등세를 보였다.²³⁾

2. 은행구조조정의 필요성²⁴⁾

성공적인 외채만기연장 등을 통해 국가부도위기는 모면하였으나,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기업의 부도위험이 높고 금융기관이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기업대출이 축소되어 자금경색이 심화되었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확대 공급해도 금융기관의 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다시 환수되는 실정이었다.

<표4> 은행대출 추이

(증감액, 억원)

	98.1	2	3	4	5. 1~25	계
은행대출	51,646	22,279	5,276	12,442	5,174	96,817
신탁대출	11,162	△14,518	△11,854	△7,937	△9,654	△32,801
계	62,808	7,761	△6,578	4,505	△4,480	64,016
(전년 동기)	(25,105)	(31,604)	(50,223)	33,147)	(12,811)	(152,890)

자료 : 한국은행

23) 가용외환보유고는 1997년 12월 18일39.4달러까지 감소하였으며, 환율은 1997년 12월 18일 달러당 1,965원까지 폭등하였다. 가용외환보유고 고갈로 대외지급능력이 상실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거래도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였다.

24) 장대홍,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2003.8, pp. 15-19.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량으로 도산하였고 실업자들도 급증하였다. IMF의 자금지원 결정이후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지만 기업들의 자금경색은 더욱 심화되어 기업도산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기업도산은 1996년 11,589개에서 1997년에는 17,168개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22,000개를 상회하게 되었다. 1997년 56만 명 수준에 불과하던 실업자 수가 1999년 2월에는 178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금리도 다소 떨어졌지만 실물부분의 경제침체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서로 맞물려 이어지는 악순환이 아직 지속되고 있었다.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들게 하려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나 최근 부도증대로 부동산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요가 적어 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의 부실정리에 애로가 있었다. 반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고금리로 인해 주식투자 수요가 감소하여 증시를 통한 증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금융기관의 총여신이 계속 줄어들어 대부분의 기업이 도산할 상황이었다. 즉, 금융 중개 빠른 시간 내에 제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국면으로 내몰릴 상황이었다.

제2절 은행구조조정의 추진²⁵⁾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1997년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총 168조 3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부실은행을 유량은행에 합병시키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여 주고,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5) 김성훈·김우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3, pp.10-15.

부실은행의 기준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²⁶⁾ 8% 이하에 놓인 은행들이었다. 정부는 1997년 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은행 중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을 각각 우량은행인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에 1998년 6월에 이전 시켰다. 당시네 서울과 제일은행은 외국회사에 매각할 것으로 계획되어 제외되었다.

1999년 초에는 조건부로 승인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되어 한빛은행이, 하나은행과 보람은행도 합병되어 하나은행이, 그리고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과 합병하여 국민은행으로 되었다. 1999년 9월에는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에 합병되었으며 2001년에는 국민과 주택은행이 합병하여 국민은행이 되었고, 평화은행이 한빛은행에 합병하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02년에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하였으며, 2003년에는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합병하였다가 2006년에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 아울러 국외 자본으로서 뉴브리지캐피탈이 1999년 2월에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론스타가 2003년 10월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시티은행은 2004년 2월에 한미은행을 인수했고, 스탠다드체터은행은 2005년 1월에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 인수했다.²⁷⁾

결국 2006년 6월말 전체금융구조조정 하에서의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구조조정은 <표5>와 같이 1997년 말 총 33개 은행에서 인가취소 은행5개 합병된 은행 11개 등 2006년 6월말 18개 은행으로 은행수가 대폭 감소하여 비중이 48.5%로 크게 축소되었다.

26) BIS 자기자본비율 = (BIS 기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위험가중자산 = (대차대조표자산 × 자산별 위험가중치) + (부외자산 × 자산별 신용환산율 × 자산별 위험 가중치)

27)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관계의 승계와 그 내용.”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12, pp.27-35.

<표5>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금융권별	1997년 말 총기관수(A)	구조조정현황					신설등	현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병	해산. 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1	-	16	48.5	1	18
제2금융권	2,070	164	171	533	868	41.9	106	1,308
합계	2,103	169	182	533	884	42.0	107	1,326

자료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표에서처럼 예금대지급 부분 즉, 예금자들의 부분보증예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은행들(1998년 퇴출된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을 우량은행으로 계약이전 시킨 경우에는 표에서처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만큼 공적자금을 출연하였다. 여기에 총 13조 9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표6>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현황(1997.11~2007.3)

(단위: 조원)

	출자	출연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행	34.0	13.9	14.4	24.6	86.9
제2금융권	29.5	4.6	2.9	11.8	79.0
해외금융기관	-	-	-	2.4	2.4
계	63.5	18.5	17.3	38.7	168.3

자료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아울러 은행의 청산이나 파산 또는 계약이전이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소지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정상화 또는 매각을 위한 출자를 하였다. <표6>의 은행 출자 34조원이 바로 이경우로 제일, 서울 그리고 조흥은행 등 주로 대형은행에 출자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인데 표에 따를 경우 은행권 부실채권매입금액은 총 24조 6천억 원 규모였다.

제3절 은행산업의 변화

은행산업이 구조조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를 보면 앞서 논의한 공적자금투입의 도움으로 은행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이 1997년 7.04%에서 1999년 10.83%로 크게 향상되었다. 동 자기자본비율은 2005년에는 12.43%에 도달하여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 이후에 은행산업의 자본적정성이 매우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 자기자본비율은 2005년에는 12.43%에 도달하여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은행구조조정 이후에 은행산업의 자본적정성이 매우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부실채권정리를 통해 진행된 구조조정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수익률도 2001년부터 적자상태를 벗어나 15.88%에 달하는 수익성을 내도록 하였다. 특히 은행구조 조정 시 부실채권정리의 결과로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이 1999년 8.3%에서 2006년 0.71%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은행자산의 건전성도 괄목상대하게 향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8)

이 같은 자산건전성의 도움으로 총자산수익률도 마침내 2001년부터 양의 값을 갖

28) 정지만·지동현,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0.11, pp.21-24.

기 시작하면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되어오던 적자상태를 벗어나 2005년에는 수익률 1.23%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구조조정 이후에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구조조정 이후의 은행산업의 변화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IS 자기자본비율	7.04	8.23	10.83	10.53	10.81	10.52	10.45	11.26	12.43	11.9
자기자본 수익률	-14.18	-52.53	-23.13	-11.9	15.88	11.67	2.16	17.96	20.33	14.73
무수익 여신비율	-	-	8.3	6.6	2.9	1.9	2.2	1.7	1.1	0.71
총자산 수익률	-0.93	-3.25	-1.31	-0.57	0.76	0.59	0.13	0.89	1.23	0.93

자료: 1.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1997~2005)

2. 2006년 자료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

3. 2006년 무수익여신비율은 2007년 1월 24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4. 무수익여신비율의 1997년과 1998년 자료는 기준이 달라 제외함

제4절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작업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작업은 크게 2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단계(1998년 2월~2000년8월)는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우선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기업의 과도한 부채구조의 전근대적인 경영체제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단계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활목할 만한 경기회복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

나, 단기간의 경기회복으로 구조개혁 성과에 대한 자만심과 개혁피로감이 증가하였고, 한편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98.1.15)된 제일은행, 서울은행에 선행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에 의한 일시적 회생은 그 후 계속적으로 금융개혁의 걸림이 되고 있으며, 이 후 불거진 대우사태 등으로 다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특히,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이 약 31,2조원에 달하였고, 그 결과 공적자금이 크게 부족하게 되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짐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2000년 들어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 지속, 일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의 외부충격요인이 가세함에 따라 경제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0년 9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금융구조조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과 금융구조개혁의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잠재부실 조기정리를 통한 건전성회복과 부실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상시적안 구조조정 시스템정립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의 마무리 작업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1. 제 1단계 은행 구조조정²⁹⁾

가. 제일·서울은행

한보그룹과 기아자동차의 부도 등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이미 재무구조가 악화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98년 1월말 감사 및 은행당 1.5조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일단

29) 허홍(2003.03), 전계논문, pp. 12-19.

유동성위기를 넘겼으나 해외매각이 결정되었다. 98년 4월~7월중 회계법인(Coopers & Lybrand)의 재무실사를 거쳐 주간사(Morgan Stanley)와의 협의 하에 매각구조가 도출되었다.

이후 IMF와의 4차 합의에 따라 99년 1월말을 목표로 매각을 추진하던 중 98년 12월말 제일은행은 미국의 구조조정전문회사인 New Bridge Capital사의 컨소시엄과 투자의향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하고 정식매매계약서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작업에 착수하였다. 서울은행도 매각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99년 2월 22일 세계 최우량 은행의 하나인 HSBC와 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교환하였다.

나. 5개 퇴출은행

금융감독위원회는 98년 6월 29일, 97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 대동은행, 동남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5개 은행들은 자기자본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이행된다 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이 목표수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5개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에 계약이전하고 영업을 정지시킨 후 인가를 취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5개 정리은행 및 5개 인수은행에 2.2조원이 투입되어 7,3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수은행에 이전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차액보전을 위해 5.8조원, 그리고 인수은행의 중자지원을 위해 1.2조원이 투입되었다.

다. 7개 조건부승인 은행

금융감독위원회는 97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에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 5개 퇴출은행을 제외한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해 강력한 자구노력, 합병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승인 하였다. 강원은행의 경우 증자계획이 현대그룹의 증자계획이 현대그룹의 증자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제 업무의 포기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 6%를 충족하면 되는 충북은행의 증자계획도 경영평가위원회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을 발표하고 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재탄생하였다.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해 98년 9월까지 1.7조원이 투입되어 4.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고 증자를 위해 3.3조원이 투입되었다. 두 은행의 합병에 대해 98년 9월말까지 1.7조원이 투입되어 4.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고 증자를 위해 3.3조원이 투입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빛은행은 99년 1월 22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인원 및 점포 축소, 고정자산 처분, 경영진 교체, 부실채권 축소, 기업개선작업 확대,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등을 통한 손실부담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정부지원조건으로 요구되었다. 외환은행과 평화은행은 자체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통해 3,360억 원을 간접 출자하는 방안이 99년 1월 말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독일계 Commerz 은행의 추가출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평화은행은 98년 10월 21일 은행법 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 원으로 감자한 뒤 98년 10월 29이라 1,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한편 조흥은행은 98년 12월 17일 강원은행 및 현대중금과의 3자 합병을 발표하였으며 99년 1월 15일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99년 4월 30일까지 합병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표8> 제1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 내용

◆ **제일은행 · 서울은행**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98.1.15)
- 감자 및 은행당 1조 5,000억 원 정부출자(98.1.31)
- 회계법인(Coopers & Lybrand)의 재무실사(98.4~7)
- 제일은행이 New Bridge Capital사의 컨소시엄에 매각 결정(98.12.31)
- 서울은행이 HSBC에 매각 결정(99.2.22)

◆ **97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8% 미달 12개 은행**

-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98.4)
- 자산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 평가(98.5.1~6.8)
-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리방안 결정(98.6.29)
 - ▷ 조건부 승인 : 7개 은행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
 - * 경영혁신 및 자본금 보강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미 이행시 퇴출, 합병 등을 추진
 - ▷ 불승인 : 5개 은행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 *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에 계약이전(P&A) 하고 인가 취소를 통한 퇴출 결정
- 상업 · 한일은행 합병 발표(98.7.31)후 한빛은행으로 합병(99.1.4)
- 조흥 · 강원은행 · 현대중금 3자 합병 발표(98.12.17)
- 충북은행, 조흥 · 강원은행과 합병합의(99.2.12)

◆ **97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8%초과 12개 은행**

- 국민, 주택, 하나, 보람, 신한, 한미,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에 대해 경영진단(98.9)
- 하나, 보람은행 합병 발표(98.9.8)후 합병등기(99.1.6)
- 국민은행,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발표(98.9.11) 후 합병등기(99.1.5)

※ 본고가 완성된 “02년 말경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였고, 이어서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합병 절차를 논의 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은행은 99년 2월 12일 조흥은행 및 강원은행과 합병의향서를 교환 하였으나 99년 2월 19일 완전감자 명령이 부과되었다.

라. 97년 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초과 은행

저하된 장기신용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경영개선권고명령을, 제주은행이 경영 개선이 저하된 장기신용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경영 개선 권고 명령을, 제주은행이 경영 개선 조치 요구를 받았다.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는 당장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않았지만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실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들 은행 중 98년 9월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간 및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간에 금융 산업 초유의 자발적 합병이 성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99년 1월 5일,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99년 1월 6일 각각 합병등기를 마쳤다. 제주은행은 98년 9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99년 12월 10일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98년 12월 16일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뒤 99년 1월 16일 경영진 대폭 교체,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1.8조원이 투입되어 2.9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되고 0.3조원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다.

하나·보람은행의 합병에 대해 0.2조원이 투입되어 0.4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으며 증자지원을 위해 0.3조원이 추가 투입되었고 국민·장은의 합병에 대해서도 0.2조원이 투입되어 0.2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 되었다. 대구·제주·부산·경남은행에 대해서는 1.1조원이 투입되어 2.3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다.

2.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1단계 구조조정으로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 중개 기능이 어느 정도 복원되는 성과를 거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대외여건의 악화, 대우 등 잠재부실이 현재화됨에 따라, 2000년 하반기부터 대외여건의 악화, 대우 등 잠재부실이 현재화됨에 따라 금융 산업을 정상화하고 금융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2000년 9월 2단계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잠재손실 전액 반영 시 2000년 6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다. 이후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계획의 적정성 및 은행의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제주, 광주, 경남)에 대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수준이 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이 중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은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고,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에게 매각되었다.

서울은행은 해외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고 2001년 말 서울은행이 제출한 구조조정방안을 토대로 우량은행과 합병, 민간 기업 등의 인수, 정부소유은행과 합병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제 5장 은행구조조정정책 평가

제1절 부실은행 정리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경제주체 간에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업종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은행을 공공서비스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느라 사적기업이라는 인식이 매우 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관치금융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은행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외환위기 직후 누적된 부실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도한 부실금융기관(총 613개)은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정부와 감독당국은 IMF, IBRD, OECD의 지배구조 권고안³⁰⁾을 기초로 하여 주주권강화, 기업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 제고,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으로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예금은행의 경우에는 1997년 말 33개사에서 14개사가 인가취소 또는 합병 등으로 문을 닫았고, 1개사가 신설되어 2002년 1월말 현재 20개사가 남아서 운영되었다. 당시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실은행에 대한 정리 그 자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위기 직후 부실은행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30) OECD의 지배구조 관련 권고사항은 1. 주주의 이익보호와 주주권침해 시 시정기회보장, 2. 소액주주나 외국인주주 등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3. 채권자나 소비자 등 법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권리 인정, 4. 재무상태, 소유권, 지배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시, 5. 이사회에 의한 효과적인 기업 감시와 기업 . 주주에 대한 이사회 책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켰으며, 경제시스템의 오랜 구조적 문제, 즉 기업부문의 과잉부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리 대상 은행의 선정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는 없었는지, 부실은행의 정리절차나 정리방식은 효과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표9>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실적

금융 권별	97년말 총 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 등	현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병	해산·가교사이 진, 영업정지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9	-	14	42.4	1	20
비은행	2,068	118	144	337	599	28.9	57	1,526
합 계	2,101	123	153	337	613	29.1	58	1,546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1. 부실은행 정리방식³¹⁾

정리방식의 선택은 은행의 종류, 규모 및 파급효과, 인수상대방 유무, 신속한 정리 필요성 여부, 공적자금의 투입규모의 정도, 도산위험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전(purchase & assumption transaction ; P&A) 방식, 정부지원 합병(government-assisted mergers) 방식, 해외매각 방식,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계약이전 방식이었다. 이

31) 이종규, 「경제위기 :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1.12, pp.8-13.

는 여타 방식들의 경우당해 은행이 계속 존속되었던 반면, 계약이전 방식은 당해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됨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개 퇴출은행은 P&A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에 의해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당시의 긴박한 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P&A에 의한 분실은행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지역사회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해당 은행의 임직원의 실직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은 크게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청산절차를 수반하는 폐쇄형(closed bank)과 청산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방형(open bank)으로 구분된다.

청산절차를 수반하는 폐쇄형은 청산을 통한 예금지급(deposit payoffs) 및 부보 예금이전(insured deposit transfers), 자산인수및부채승계 (purchase and assumption),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의 방식이 있으며, 청산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방형은 크게 구제합병, 정부의 자금지원, 국유화,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 중 P&A 방식은 청산의 경우와 달리 비 부보 예금을 포함한 모든 예금이 인수되기 때문에 예금자의 입장에서 예금채권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청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고객단계의 단절이 방지됨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합병과 달리 종업원의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자본금의 완전감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 및 임직원에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P&A 방식에 의해 정리되는 은행의 규모는 매우 작다. 미국에서는 자국규모가 1억불 이상이면 대형은행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대형은행을 즉각 퇴출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에 의하여 지역 내 특정 은행이 퇴출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퇴출보다는 희생의 절차를 모색 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의 구조조정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대표적인 개방형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 자금지원이라 하겠다. 부실은행을 즉각 퇴출시킬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심대하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장기저리 대출, 자금예치, 부실자산 매입, 채무인수 등을 통해 부실은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정부 보증을 통해 부실자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당해 은행의 부실 부문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취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은행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유동성확보가 용이해지며 부실기업은 workout을 통해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가능한 방법은 국유화이다. 실제 정부는 상업, 한일 은행 등 대형은행들은 계약이전 방식이 아닌 합병을 통한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5개 퇴출은행들이 국유화의 방식에 의해 시장에 잔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금융위기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위기극복 과정에서 자국의 부실은행들을 명시적으로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스웨덴은 1991~1993년 중 부실화된 Nordbanken을 국유화하였으며, 멕시코는 1982년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은행들을 국유화하였다. 스웨덴의 Nordbanken은 1993년 Got Bank와 합병한 후 리스터럭처링을 거쳐 1994년에는 스웨덴 은행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부실은행을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나, 자산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 대안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2. 부실은행의 해외매각³²⁾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합의사항에 따라 제일은행 등 국유화된 부실은행의 해외매각을 적극 추진해 왔다. 부실은행 해외매각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32) 이종규(2001), 상계서, pp.13-14.

고 최근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헐값 매각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³³⁾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의 역할은 제반 폐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실채권 정리, 추가 자본 확충, 포괄적인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매각이 예정된 은행의 경우에는 기대되는 순기능을 강화하고 우려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인부합적 매각구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유인부합적 매각구조에는 대출채권, 유가증권 가치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부가 보증하거나 무수익자산에 대하여 보유비용(carrying costs)이나 적정수익률을 보장한다든지 워크아웃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 등의 정리 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인수금융기관과 공유(loss sharing)하도록 하는 방안은 손실의 과다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일정 기간 내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이 인수 시의 장부 가치에 미달할 경우 발생 손실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가령 80%)을 보전해 주는 손실공유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인수자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고 있다.³⁴⁾ 손실공유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인수자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고 있다. 손실공유 방안은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문제여신을 적극 관리할 유인을 만들어 준다. 또한 손실공유방안은 인수은행으로의 부실자산 이전을 최대한 가능케 하여 정부의 초기 비용지출 규모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준다.

33) 제일은행의 매각조건은 비슷한 시기 일본의 장기신용은행(LTCB)의 해외매각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으나, 1998년 6월 금융재건법에 의해 국유화된 일본 장기신용은행은 2000년 2월 New LTCB Partners에게 매각되었다.

34) 박재하, 「은행지배구조의 평가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5.12, p.25.

<표 10> FDIC의 손실공유 형태의 은행정리 현황 (1991-1993)

정리일	도산은행명	위치	자산	정리 비용	자산대비 정리비용
09/19/91	Southeast bank N.A.	Miami,FL	\$10,478	\$0	0.00
10/10/91	New Dartmouth Bank	Manchester, NH	2,268	571	25.19
10/10/91	First New Hampshire	Concord, NH	2,109	319	15.14
11/14/91	Connecticut Savings Bank	New Haven, CT	1,047	207	19.77
08/21/92	Attetboro Pawtucket SB	Pawtucket,RI	595	32	5.41
10/02/92	First Constitution Bank	New Haven, CT	1,580	127	8.04
10/02/92	The Howard Savings Bank	Livingston,NJ	3,258	87	2.67
12/04/92	Heritage Bank fot Savings	Holyoke,MA	1,272	21	1.70
12/11/92	Eastland Saving Bank	Woonsicket, RI	545	17	3.30
02/11/92	Meritor Savings Bank	Philadelphoa, PA	3,579	0	0.00
02/13/93	First City, Texas- Austin,N.A.	Austin,TX	347	0	0.00
02/13/93	First City, Texas-Dallas	Dallas,TX	1,325	0	0.00
02/13/93	First City, Texas-Houston,N.A.	Houston,TX	3,576	0	0.00
04/23/93	Missouri Bside Bank, N.A	Kansas City, MO	1,911	356	18.62
06/04/93	The First National Bank of Vermont	Bradford, VT	225	34	14.97
08/12/93	Crossland Savings, FSB	Brooklyn, NY	7,269	740	10.18
Total			\$41,384	\$2,511	6.07

자료 : FDIC

따라서 인수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과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건전여신의 회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인수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은행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기가 용이해지므로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 2절 건전성 제고

1. 부실채권 정리방식³⁵⁾

우리나라가 취한 신속한 구조조정방식은³⁶⁾ 개별 부실채권에 대한 정밀한 평가과정이 생략되긴 했지만 금융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태국의 경우에는 반대의 방식(slow & clean)으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일방적 자금투입이 아닌 은행의 부실정리 동기를 우선하고 손실부담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구조조정이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결국 경제회복의 지연이 초래되었다.

McKinsey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아시아의 외환위기 경험국 중에는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부실채권의 매입 규모, 매입대비 정리 규모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35) 권순일,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정송,” 「BFL」 제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9, pp.12-14.

36) 대량으로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개별 채권의 회수가치를 극대화하는 접근방법을 말하며, quick & dirty Approach 이라고도 부른다.

<표11> 부실채권 정리의 국가 간 비교

국가	AMC	영업변수	매입채권규모 (10억달러)	채권정리규모	추정회수율
한국	KAMCO	4	58.0	70	42
중국	Hiarong 등	2	168.0	27	42
인도네시아	IBRA	3	31.0	14	42
말레이시아	Danaharta	4	12.5	57	43
일본	RCC	5	73.1	59	N/A
태국	FRA	3	22.0	61	27
미국	RTC (1985-95)	3	282.0	93	83

자료 : McKinsey

그러나 대량 부실채권 거래³⁷⁾ 이후 해당 채무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희생 불가능한 기업을 존속시킨다든지, 희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 충분한 채무조정이 없었다든지, 관련 주주 및 채권자간에 손실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불공정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³⁸⁾ 즉, 기업퇴출제도와 관행의 낙후,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희생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워크아웃기업의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규모는 부실규모에 비해 미약하며, 워크아웃 자체의 진행 속도 또한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자산관리공사 채권과 부실채권의 교환(swap)이라는 회계적 방식이 채택되었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많은 규모가 최근 해당 은행으로 환매 조치 되었다.

38) 강우찬, 「금융기관 도산처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3.3, p.35.

<표12> 워크아웃기업의 채무재조정 및 자금지원

(2001년 12월 현재, 단위:조원)

구분	채권액	1차조정			2차조정			
		출자 전환	이자 면제	신규 자금	출자 전환	이자 면제	신규 자금	
대우	62	5.3	19.7	6.3	미 파악			
비대우	6대 이하	25	3.8	0.8	2.1	6.1	0.4	0.2
	기타 기업	11	0.4	0.0	0.4	0.4	0.0	0.0
계	98	9.5	20.5	8.8	6.5	0.4	0.2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표13> 워크아웃의 진행

(2001년 12월 현재, 단위:개사)

구분	신청	탈락	추진	합병	졸업	중단	진행 중	채권액	
대우계열	12	-	12	-	4	1	7	62조원	
비 대우	6대 이하 계열	49	5	44	13	15	6	10	25조원
	64대 이하	45	4	41	3	28	5	5	11조원
합계	106	9	97	16	47	12	22	98조원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GDP의 25%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불가피 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정리방식, 합병 시 조합의 결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에 있어서 비록 대출의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사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대량매입 함으로써 개별 대출자산의 엄격한 평가가정이 생략된 것은 문제였다.³⁹⁾ 공적자금투입의 필요성과 도덕적 해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시장수단의 활성화가 먼저 필요했다고 보여 진다.

위기초기 단계에 있어서 은행의 부실채권은 주루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되어 정리되었다. 그러나 실사가 결여도니 공적자금 투입은 관련 은행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방법에 있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장수단이 필요하다.

CRC, CRV, ABS 등 다양한 시장 혹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진정한 가격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⁰⁾

2. 부실채권 규모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융권내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 된 것은 사실이다. 1998년 3월말 정부가 추정 한 부실채권 규모는 금융권 전체로 112조원에 달하였으나 2001년 46.3조원으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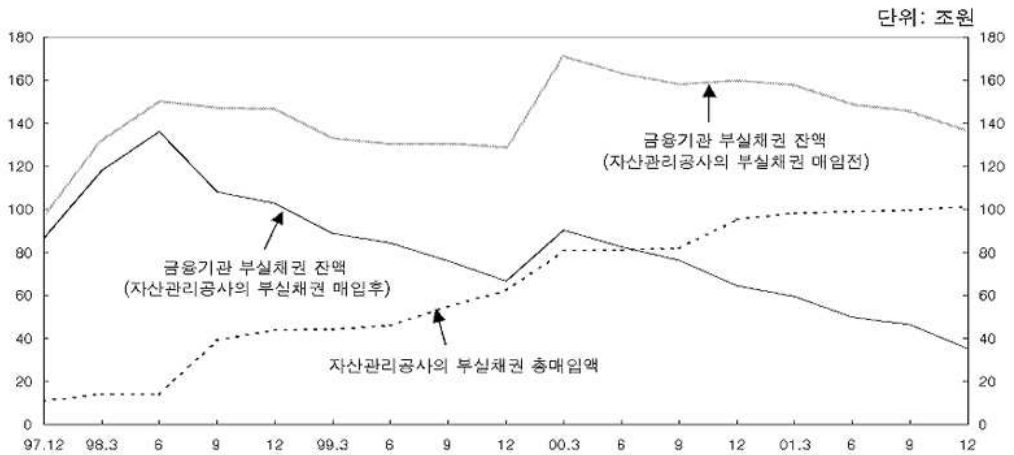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1999년 중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도입 및 대우사태 영

39) 고정자산의 경우 장부가의 50%,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의 3%로 매입가를 고정시켰다.

40) 잠재부실의 정리를 위해서 AMC, CRC, CRV, Vulture Fund등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활성화 되었고 또한 국내 기관투자가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실채권 등 구조조정 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유인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향으로 증가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 중이다.

<그림 1> 금융기관 부실채권 잔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FLC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잔액,
 2)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총매입액은 액면가 기준

그러나 부실채권 규모 추정의 핵심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선택과 상관없이 잠재부실채권 규모를 얼마나 보느냐에 있다. 가령 국제기준 요주의여신은 차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축소 노력을 기울일 경우 은행의 손실 없이 회수가 가능 할 수 있다. 한편 기업개선 작업(workout)이 진행되면 정상여신의 30%까지 부실채권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가도 있지만 그 비율은 재벌과 채권은행 사이에 합리적인 손실공유방안(loss-sharing scheme)이 도출된다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¹⁾

4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으로 본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현황 및 향후과제」, 경제통제국 기업경영분석팀, 2002.8, p.26.

또한 최정점이 부실여신(peak NPL) 규모는 실물경제의 회복속도에 달려있는데 최근의 재반 경제지표로 미루어볼 때 외환위기 이후 외국토지가들이 예상했던 총여신의 40% 이상은 과대 계상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자산건전성분류(FCL)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산분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전제 하에 개별기업의 이자보상 배율을 기준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면 2000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그러한 차입을 부실채권이라 정의 하면, 차입비중으로 2000년 상장사의 부실채권비율은 31.0%로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있다.

<표14> 상장기업의 부실채권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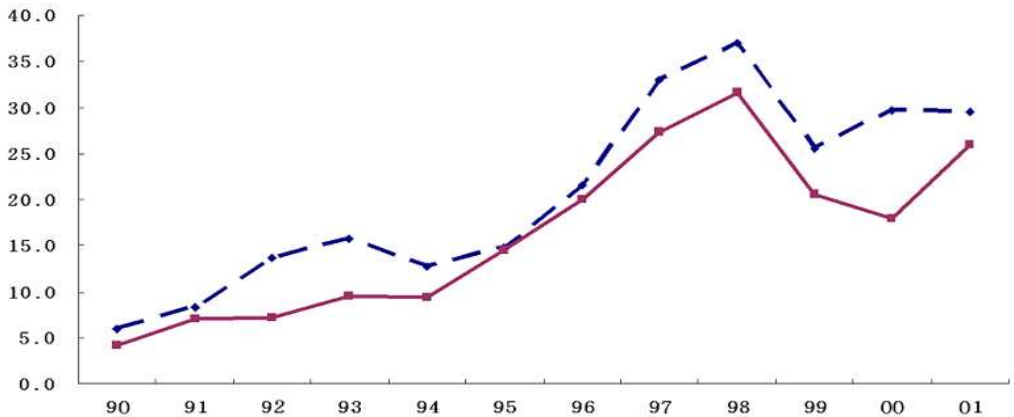
(단위:10억)

연도	전체 기업수	총부채	부실 기업수	부실 기업수 비중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	부실기업 차입금	구성비
1995	662 (199.8)	244,59 3	109 (17.5)	16.5	29,692	12.1	111,462	15,680	14.1
1996	654 (161.3)	291,05 8	158 (-6.9)	24.2	58,314	20.0	137,133	29,554	21.6
1997	641 (131.0)	392,98 0	226 (-56.0)	35.3	122,627	31.2	192,767	65,111	33.8
1998	600 (107.5)	393,42 6	225 (-151.9)	37.5	126,144	32.1	167,941	65,612	39.1
1999	483 (252.4)	339,90 8	94 (-115.1)	19.5	83,685	24.6	163,984	47,549	34.7
2000	561 (262.5)	320,52 1	156 (-152.0)	27.8	91,798	28.6	83,075	25,773	31.0

- 주 ; 1) 이자보상비율이 2000%이상, -2000% 이하의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2) ()는 이자보상비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100)의 평균
 3) 기업부실 여부의 결정기준은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나타내주는 이자보상 비율임.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그러나 비상장사의 경우는 2000년 부실채권비율이 전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43.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들어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감소분이 부채규모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고 가정하면, 수익성 악화에 따라 상기 정의에 따른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상장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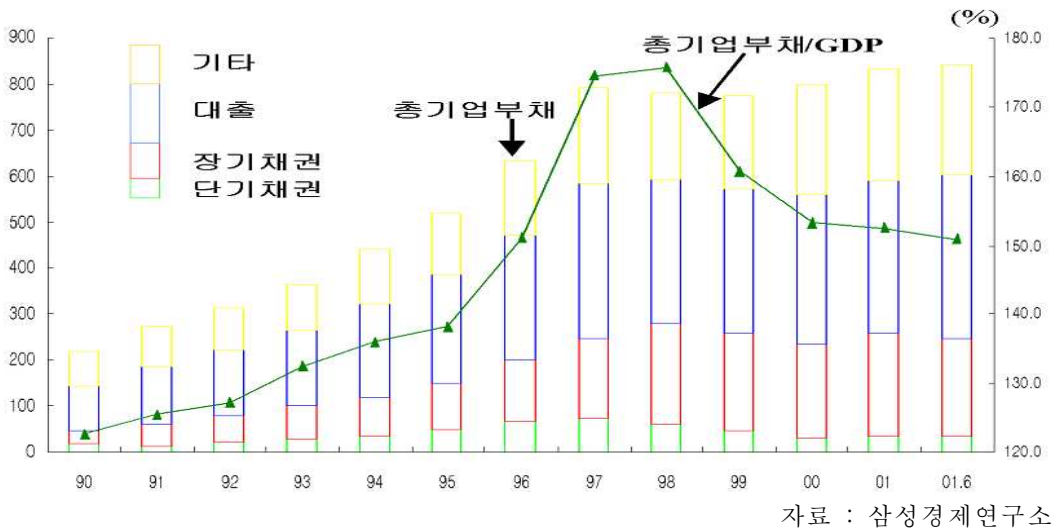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이처럼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채는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순환계정상 기업부문의 총부채는 2002년 6월말 831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GDP의 약 153%에 해당된다. 부채규모는 98년 788조원을 정점으

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1년 2/4분기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기업부채의 평균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매년 GDPdml 15%가 이자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3> 기업부문의 부채 추이



제3절 수익성 제고⁴²⁾

1. 주요 경영지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재무구조조정(balance sheet restructuring) 과정에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향상 되고 있고, 여신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2001년말 일반은행 BIS비율은 평균 10.8%에 달하는 등 거의 모든 은행들이 10%에 근접하거나 10%를 상회하고 있다.

<표15>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여신건전성

(단위 : 조원,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BBS	7.04	8.12	10.83	10.53	10.81
자기자본	18.1 (4.3)	16.0 (3.8)	21.7 (4.8)	20.1 (4.3)	25.3 (4.8)
고정이하여신	22.7 (6.0)	21.2 (7.4)	44.5 (13.6)	32.0 (8.9)	18.8 (3.4)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내는 은행계정 총자산 대비 비중

2)()내는 총여신 대비 비중

42) 구본성, 「국내은행의 성장성과 국제화 방향」, 예금보험공사, 2008.8, pp.42-50.

<표16> 금융업종별 여신건전성 현황

(2002년 6월말. 단위 조원, %)

	은행	비은행	보험	증권·투신
고정이하여신(A)	14.2	11.8	2.2	3.9
총여신(B)	603.2	113.3	47.8	8.5
고정이하여신비율(A/B)	2.4	10.4	4.6	45.9
순고정이하여신(C)	7.3	3.7	0.9	1.2
순고정이하여신비율(C/B)	1.2	3.6	1.9	20.7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권의 고정이하 여신 총액도 1999년 44.5조원 수준을 고비로 2001년말 역대 최저수준인 총여신의 3.4%로 크게 감축되었다. 2002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고정이하 여신규모가 더 감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투신사, 상호저축은행, 리스사 등의 부실채권 규모에 비하면 은행의 건전성은 크게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제2금융권에 대한 regulatory forbearance를 감안한다면 은행권의 부실채권 감축 노력은 놀랄만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은행의 총자산이익율(ROA)은 부실자산 매각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향상과 수수료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1년 중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자기자본이익율(ROE)도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노정하다가 2001년에는 외견상 15%이상을 기록하게 되었다.

<표17>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ROA 및 ROE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당기순이익	-125,106	-59,960	-28,405	41,672
ROA	-3.25	-1.31	-0.57	0.76
ROE	-52.53	-23.13	-11.90	15.88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그러나 아직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선진국의 은행보다 열위에 있다. 국내 일반은행의 ROA와 ROE는 세계 유수의 은행들과 비교할 때 아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국내은행의 경우 아직 대손충당금적립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티은행 등 일류은행의 경우 ROA가 1.5%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준이다. ROE는 일류은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할 수 있으나 국내은행들이 선진국은행에 비해 부채/자본이 높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국내은행들의 자본충실도가 낮기(undercapitalized) 때문에 ROE가 높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ROE 수준 또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⁴³⁾

현재 일반은행의 평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잠재부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자본의 구성에 있어서도 보완자본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식이 채무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 인식 동기부여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

43) 은행의 자본 보강을 위해 증자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의 혼성형태인 혼합 증권(hybrid capital)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키고, 손실 이익을 위한 자본여력(cushion capital)의 확충, 내부잉여 축적과 함께 보통주, 후순위채, hybrid capital의 발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수익의 지속성

2001년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수익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완전한 회복국면에 있으나, 장기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영측면 또는 제도적 측면의 새로운 모색을 필요로 하였다. 예수금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자수익자산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은행들은 풍부한 예금유입과 합병에 따른 가격결정력 강화를 바탕으로 수신금리를 인하시키면서 2000년 9월 이후 예대금리차(interest spread)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크게 확대 되었다. 전통적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중심으로 비이자 수익이 증가 한 것도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의 급증을 배경으로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의 경우 총 영업이익의 33.4%를 차지하였다. 신탁수수료의 경우 과거 암묵적 약속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원금 보전형 금전신탁의 편법적 활용을 통해 오히려 은행계정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2001년부터는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기타 유가증권 및 외환매매이익 등의 비이자 수익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44)

이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은 과거 관치금융의 틀 안에서 정부 산업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율극대화보다는 다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을 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경제 및 금융환경에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관행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국내 은행산업의 지속적인 자산 증가세를 감안할 때 ROA의 안정화는 수익기반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추세를 띄었으나, 이자수익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성장 기회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44)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동향 분석과 전망」, 2008, pp. 153-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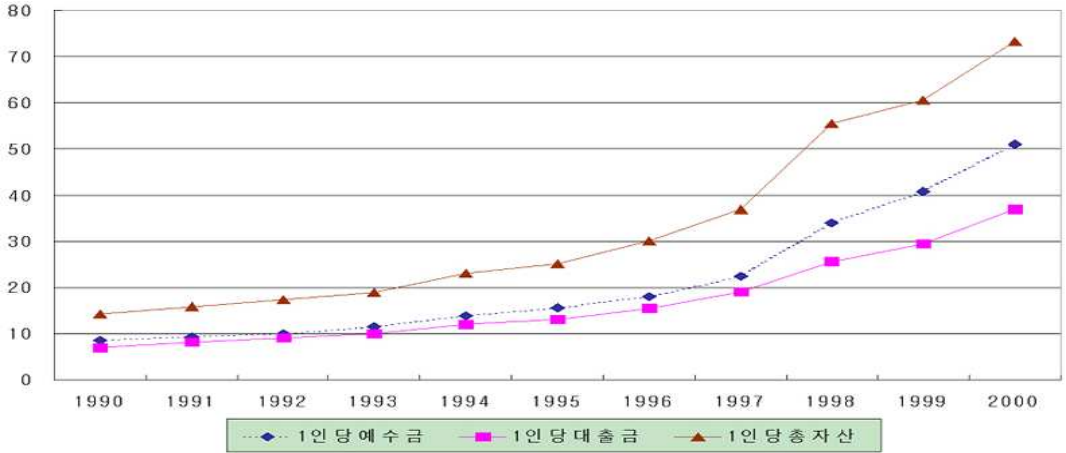
그러나 운용능력의 한계, 사회적 여론 등으로 인해 적정 예대마진의 확보가 점차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안정적이지 못한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은행 간 경쟁격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당국의 장기비전에 근거한 시장 중심적 결정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4절.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구조조정기간 중 14만 5,530명에서 8만 9,729명으로 종사자가 38.3% 감소하였다. 일반은행의 점포수는 1997년말의 6,177개에서 2001년말에는 4,857개로 21.4% 감소하였다. 인력, 점포, 자회사의 과잉보유 및 비경제성은 국내은행의 고질적인 수익성 저해요인이었으나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운영경비율(운영경비/총이익)은 구조조정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현재 약 40%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비업무용 고정자산은 총자산의 증가세와 은행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및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업무용 자산 또한 적자점포 정리와 통합, 점포별 특성화, 전자 금융형 시설의 확충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의 비용효율화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인당 및 점포당 대출금, 예수금, 총자산 등 단위 생산성 지표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4> 1인당 산출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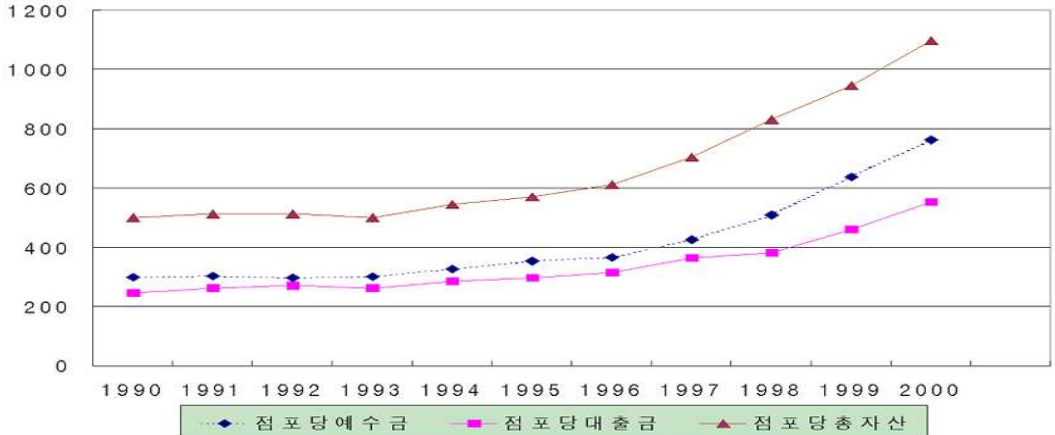
(억 원)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5>점포당 산출물 추이

(억 원)



자료 ; 금융감독원

1인당 예수금, 대출금 및 총자산 증가율은 1990~1997년 사이 연평균 15% 내외 인데 반해, 1998~2000년 사이에는 각각 연평균 32.3%, 24.9%, 26.8%를 보임으로써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집포당 예수금, 대출금 및 총자산의 경우에도 1990~1997년 사이 연평균 5.4%, 5.9% 5.1%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1998~2000년 사이에는 각각 연평균 21.6%, 15.3%, 16.0%로서 성장률이 3배 이상을 기록하였다.⁴⁵⁾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 국내 은행들의 효율성 수준이 제고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대규모의 지점 및 인원 감축은 일인당 생산성의 제고와 비용절감 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는 은행들이 확장 경영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경우 언제든지 효율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X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X 효율성은 유사한 규제와 서비스를 가진 은행들 사이에도 비용이나 수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영업운영상의 효율성 차이를 X 효율성이라 정의한다. X 효율성은 생산요소의 구입 및 사용방법, 조직설계, 보상 및 유인체계, 경영진의 리더십 등에 의해 차이가 나게 된다. 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최우량 은행은 평균적인 은행에 비해 약 20% 이상의 X 효율성을 시현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약 22.5%의 X 효율성 차이가 은행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순한 인원감축 또는 지점 폐쇄 등의 축소지향적 경영보다는 X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전략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45) 김병연, 「은행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12. pp. 20-25.

46) 박경서, 「은행의 소유,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6, pp.13-19.

제5절 시장 친화적 금융관행

초기 부실에 대한 과소평가는 공적자금이 2회로 나누어 조성. 집행되게 하였으며, 그 사이 1년여 기간 동안 구조조정이 진척되지 못하였다.

부실의 과소평가는 잠재 손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했던 점도 있지만, 손실인 지(recognition) 후 최소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재원(cushion capital)의 제약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 1차 공적자금 소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적자금조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1999년 중반 이후부터 회사채시장 냉각에 따른 기업자금경색문제가 부각되는 2000년 말까지 1년여 기간 동안 구조조정이 미진하게 되었다. 2차 공적자금의 경우에도 부실채권 처리에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제약 때문에 부실의 범위를 워크아웃 기업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건전성 감독기준 및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원칙에 의한 엄격한 집행은 상당히 미흡하였다. 감독당국이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거나 감독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관치금융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 감독권이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적기시 정조치를 투명화. 객관화. 의무화하는 감독규정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행하는 자의성을 보였다. 적기시정조치가 엄격히 집행될 때 수반되는 공적자금 부담 또는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적기시정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행의 일관성도 결여되었다. 즉,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이 발생하면 감독기관의 의무적으로 이를 집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감독규정 적용을 엄격히 하지 않거나 부실은행의 감독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등 편법사례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일정비율 이하로 낮아지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검사를 완화하여 부실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우량한 은행도 상당한 인원감축을 당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부터 은행의 자율성이 많이 회복되었으며 과거에는 은행이 실물부분의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대신 경쟁 제한적 규제와 보호라는 반대급부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통해 은행이 상업적심판과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과의 정책적 관계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은행은 보다 상업적 동기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정부의 산업 및 금융정책보다는 개별은행의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일례로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일부 은행의 신규여신제공 거부는 이러한 정부와 은행 간의 관계의 변화로 보여진다.⁴⁷⁾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관행을 불식시키고 은행의 상업적 동기와 자율성이 보장되려면 정부와 대중의 인식개선, 그리고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언론은 아직도 기업부문의 신용위험에 대한 진지한 고민 보다는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거의 인식과 관행이 일소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회피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보수적인 여신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대출, 특히 신용대출의 확대를 요구하거나, 금리나 수수료결정에 있어서 원가에 충실하려는 노력조차도 지나치게 폄하하는 사회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은행에 대한 이러한 역할 부여는 다른 예가 많다. 시중의 자금이 기업 부분의 신용위험을 피해 은행예금의 형태로 유입되고 자금이 단기 부동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불가항력

47) 이동걸, 「해외 은행산업의 국제화 유인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998. 2, p.40.

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우문제가 불거진 1999년 중반이나 채권시장안정기금의 구성에 개별은행의 상업적 동기와 의사가 무시되었다.

2000년 말 2차 공적자금의 투입이 당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지 못했던 관계로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와 같은 보완대책을 필요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기업 여신(exposure)이 커지게 되었다. 2차 공적자금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50%정도의 손실을 가정하고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부족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다음 CBO를 통해 CLO 등을 통해서 소화하고, 대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은행의 CBO와 CLO 인수 혹은 신용공여(credit line)를 통해서 기업, 특히 신용등급이 BBB이하인 기업에 대한 여신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이 한시적임을 감안하면 동 상품의 만기 도래 시 관련 신용 위험 처리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은행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로서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은행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은행의 대기업여신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여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은행의 역할에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익성을 우선하되, 과거의 그릇된 여신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기업재무개선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은행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홍보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역할 제고와 함께 기업퇴출 관련 관행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희생불능기업의 조기퇴출과 희생가능기업의 신속한 희생을 위해 퇴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 기업도산법의 정착으로 채무자에 유리한 현 관행을 시정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구조조정기구들로 하여금 다양한 재무조정 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기업퇴출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 부실기업의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정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무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도 은행권의 회수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표18> 미국의 기업정리 소요시간

종류	건수	평균	Median
Chapter 1	85	1.62년	1.43년
Pre-packaged Chapter 1	34	0.21년	0.17년
계	119	1.22년	0.94년

자료 : Moody's

<표19> 미국의 은행대출 회수율

종류	건수	평균	Median
담보부	178	86.7%	100%
무담보부	19	79.4%	90%

자료 : Mood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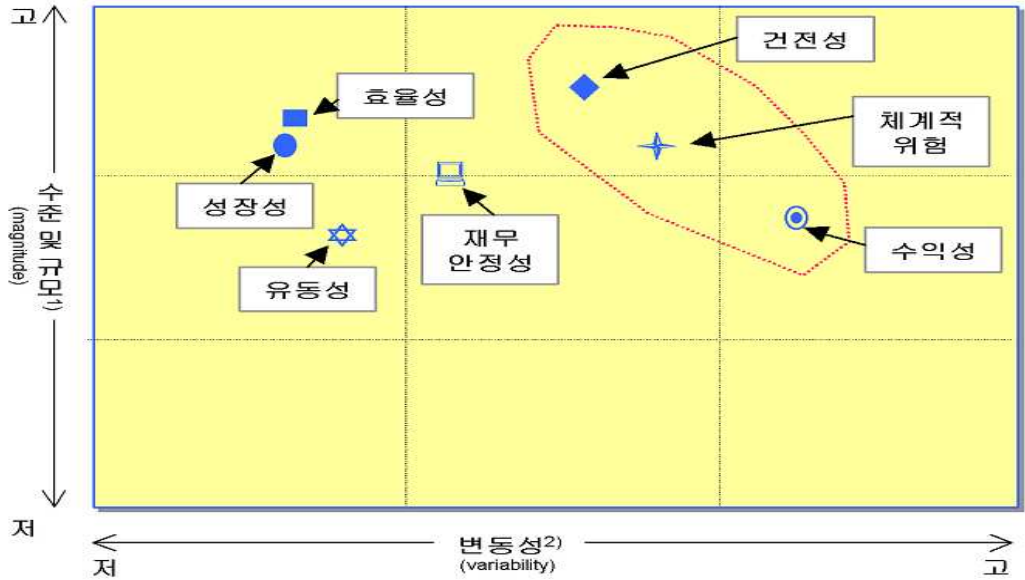
제6절 종합평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라기보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기간산업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선순환 체계는 단순히 은행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수립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물부문에 부실기업이 존재하는 한 신용경색 현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때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은행권으로의 자금 회귀 현상은

재현 될 것이 분명하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실기업이 정리되고 시장에 건전 기업만 생존하게 되면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도 자리 잡게 되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한 부실기업 정리는 은행권의 주도적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은행권의 수익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정책당국은 은행의 건전성, 체계적 위험과 같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선제적 산업구조의 재편 등과 같은 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될 정책 집행은 삼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국내은행 산업의 경쟁력 평가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주 : 1) 수준 및 규모(size or magnitude)는 각 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국내 은행 산업의 수준 및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 2) 변동성(variability)은 각 성과 지표와 관련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잠재적 위험 요인 및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성과지표의 변동성을 평가

결 론

제1절 맺는말

1990년대 초에 실시했어야 할 금융개혁이 1990년대 이 후 정부, 기업 등 이해 당사자와 개혁의 필요시에 장애자였던 정치의 정쟁이,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된 국내금융기관 부실화의 실상은 대내외의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의 보호와 재벌중심 경제구조하의 대마불사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내금융기관의 안일한 경영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한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IMF 및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건전성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규모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출발한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금융 시스템을 위기상황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시장 자체의 기능과 원리에 따라 자원의 배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부실의 정도가 경미한 금융기관을 정부의 지원으로 회생시키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구조조정은 단시일 내에 일회성의 개혁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에 걸쳐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금융구조조정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은행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DJ정부가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은행구조조정의 평가는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기의 탈출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입안되고 추진되어 온 개혁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정리해 봄으로서 향후시장 중심의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었던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중에서 은행산업에 대하여 개관하고 정부의 은행구조조정 정책이 과연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는지에 대하여 평가해 보았다. 지난 은행구조조정의 결과 건전성, 생산성, 등 지표상 개선 뿐 아니라 은행내 시스템과 관행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37조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투입되어 은행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생산성도 대규모 인력정리와 점포 정리, 합병 등을 통해서 제고되고, 수익성은 일부 은행의 경우 크게 개선되었다. 은행 관행 면에서도 외형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되고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을 중시하는 등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여 국내 은행들 중 상당수는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독자생존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한 상태에 도달하였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국내은행의 구조조정의 과정과(제1차, 제2차 구조조정) 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정책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2004년 5월까지로 예정된 기일을 앞당겨 2001년 8월 23일 195억 달러를 조기상환한 것은 경제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한 결과는 정부의 강력한 기업과 금융부분에서의 구조조정과 수출지상주의의 성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의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다. 정부가 앞으로 해야만 할 일은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처리를 위해 자동정정지제도, 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해 나가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기업의 문제가 바로 은행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경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부실은행이 생겨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경고예보시스템도 도입해야만 한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은행 합병은 선진국의 경험과는 달리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인수합병 전략이 요구되어지며, 시너지효과, 조직 내 인화단결, 새로운 은행기업의 가치창조 등의 이유로 좀 더 신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합병은행들은 합병 후 동질적인 조직문화 형성 및 인적융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합병은행은 상대은행이 지녔던 지식, 노하우등 각종무형자산과 핵심역량이 손상되어 합병의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상대은행으로부터의 역량흡수보다는 합병 주체은행의 역량을 이전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합병이 외형적 확대와 약간의 효율성 증대로 나타났을 뿐이다. 은행합병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구조는 물론 인적융화가 합병의 궁극적인 성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의 문화를 고려하여 조직통합에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은행산업의 글로벌화는 경제활동의 혈관에 해당하는 은행산업의 역할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⁴⁸⁾ 그러한 난관을 넘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구도가 금융 산업 내에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겸업화규제가 전격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도 빨리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은행민영화도 근본적인 목적을 은행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여론을 피하고 공적자금이나 조기에 회수하자는 식의 접근은 은행산업자체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면서 많은 충격과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48) 지동현,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7.7, pp. 21-32.

육이 앞으로 닥칠 은행산업의 변화의 회오리 속에서 국내은행산업의 생존여부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은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행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전향적 의식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향후 연구과제⁴⁹⁾

첫째로 미래의 은행은 전통적인 예대업무뿐만 아니라 증권업무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 금융업이 되어야 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고 펀드에도 가입하여 투자자문도 받는, 말 그대로 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종합금융업 은행의 영업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사채 발행을 인수하거나 기업 인수합병(M&A)의 중개 등 투자은행(IB) 업무도 영위할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은행에 허용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크게 위협이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것이다. 미국 4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 Bank of America(BoA)의 메릴린치 인수 등 투자은행의 몰락은 다시금 투자은행 업무의 위험성을 깨우쳐 주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은행 업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몰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철저히 하지 못한 투자은행과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자은행 업무는 위험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위험을 더욱 철저히

49) 서병호, 「국내은행의 국제화 전략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8.9, pp.17-21.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업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전통적인 은행이 투자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자. 상업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도이체뱅크(Deutsche Bank)는 채권 발행 인수와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등에 특화 한 투자은행 모델을 도입해 매출 기준 세계2위의 투자은행으로 변신했다. 이러한 도이체뱅크 성공의 주요인은 철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시사점이다.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를 우리는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한다. 더 정교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되 위험관리 등 건전성 면에서의 감독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은행의 미래 모습은 선진화 되고 수준 높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은행이어야 한다. 철저한 위험관리 체계 없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은행 업무를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법, 제도적인 기반 마련 이전에 은행 스스로 위험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이러한 위험관리의 철저함이 필요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은행산업의 미래 모습은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춘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좁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은행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2006년 국내 은행의 총 수익 중 해외 수익의 비중이 3.2%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적인 다른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작은 규모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 진출에는 우리에게 맞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에서 국내 6위에 머물던 산탄데르(Santander)은행이 일약 세계 6위의 은행으로 성장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잘 알고 같은 문화권인 남미 금융시장으로의 진출전략, 은행자신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문인 소매금융(retail banking)분야에의 집중 진출 전략, 현지화의 적극 추진 전략(현지인

최고경영자를 발탁해 인사와 영업 방식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략),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구축 전략 등이 산탄데르은행의 성공적 해외진출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국내 은행들도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단계별 진출전략(예를 들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 지역으로 먼저 진출하고 단계적으로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권, 중동, 동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 현지화 전략, 은행이 강점을 보유하는 부문으로의 집중 진출 전략, IT 시스템의 통일화를 통한 정보공유와 위험관리의 체계화 추진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금융전문 인력을 갖춘 미래의 은행모습을 생각해 본다. 서비스 산업인 금융 산업의 성패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전문 인력양성의 대폭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성과급 보상체계의 확대는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대학 때부터 투자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과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동 과정을 통해 미래의 금융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도 절실하다. 은행의 전문가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은 은행이 필요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은행산업의 성공 열쇠는 바로 이러한 우수한 금융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미래의 은행의 모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은행 업무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금융규제는 과감히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들이 효율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몫이다. 선진화된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 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은행산업의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위에서 말한 미래의 은행산업의 모습이 실현되어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는 날을 고대해 본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관계의 승계와 그 내용.”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2.
- 강우찬, 「금융기관 도산처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03.
-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1998.
- 김성훈·김우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9.
- 김영문,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퇴출된 은행원의 고용관계는 인수은행으로 승계되는 가.”, 「법학연구」 제23집, 전북대법학연구소, 2002. 12.
- 김우진, 남일충, 『소프트웨어 중심의 금융·기업 구조개혁』, 한국금융연구원, 1992.2.
- 김형배·하경효·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 권순일,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쟁송,” 「BFL」 제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2004. 9.
-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정리에 즈음한 금융감독위원장 발표문.”, 1998. 6. 29.
-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의 업무정지·계약이전결정명령등의 통지.” (주)대동 은행장 앞 공문, 1998. 6. 29.
- 금융감독원, 미국 통화감독청의 은행이사 지침서」, 은행감독1국 은행총괄과, 1999. 8.
- 금융감독원, 「은행 이사회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 은행감독1국 은행총괄과, 1999. 7.

금융감독위원회, "1997년 경제위기의 도래와 극복과정-구조개혁의 추진 내용 및 성과평가" 2002. 6.

금융감독위원회, "부실은행 정리 추진현황." 제8차 경제대책 조정회의 결과

남효순·김재형, 『금융거래법강의 II』, 법문사, 2001.

박대근·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한국경제의 분석』 제4권 제2호, 1998년 12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박종근, 「구조조정과 감독기능」, 법률SOS, 2004.

백용기·정지만, "은행위기의 원인과 예측가능성: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5권 제2호, 1999년 12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과정과 교훈」, CEO Information 제400호 2003.05.14.

예금보험공사, 「미국, 일본 및 캐나다의 적시시정조치제도」, 1998.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

유진식, 『IMF/IBRD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 한국은행특별 연구실, 2000.

이상덕, "경제위기하에서의 강제퇴출 은행의 고용승계."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2001. 12.

이승욱, "근로관계의 승계를 수반하는 사업양도의 요건." 「조정과 심판」 제5호, 중앙 노동위원회, 2001.

이종규, 『경제위기 :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1.

이진순, 『한국경제 : 위기와 개혁』, 20세기북스, 2003.

이준섭, "금융기관의 파산 및 구조조정절차에 있어서 예금자 및 주주보호의 법체계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8.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 백서」, 2000.

재정경제부, 『4대 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2001. 2.

- 정승욱,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P&A)의 법률적 문제점.”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0. 12.
- 정태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제」, 법제처, 1998. 9.
- 조운제,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조사연구자료 99-3, 1999. 한국은행.
- 최창규, 「투가적 공격이론과 한국의 외환위기」, 『경제분석』 제4권 제2호, 1998, 한국은행
-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IMF 대기성차관 협약의 주요 내용」 (1997. 12).
- 한국은행 기획부 법규실, 「부실은행 정리에 관한 법적 검토」 (1998. 7).
-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IMF와의 대기성차관 협약의 주요 내용」, 업무참고자료 98-7, 1998.12.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으로 본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현황 및 향후과제」. 경제통계국 기업경영분석팀, 2002.8.
- 허재성·유혜미,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4, 한국은행 조사국, 2002. 5.

【외국 문헌】

Alley, W. A. "Collusion versus Efficiency in the Japanese Regional Banking Industry", *Economic Studies Quarterly*, 1998, Vol. 44(3), pp.206-215.

Bain, J, "Relation of Profit Rate Industry Concentration: American Manufacturing 1936-1940,"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1998, Vol,65, pp. 293-324.

Bank of Montreal, Annual Report, 1998. <http://www.bmo.com>

Berger, A. N. and T. H. Hannan, "The Price-Concentration in the EU banking Industry", *Kredit und Kapital*, 1989, Vol.33, pp.62-98.

Park, K.H., and Weber, W.L., "A Note 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Growth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1992-2002," *Journal of Banking Finance*, 2006, Vol.30, pp.2371-2386.

Spencer Stuart, 「CEO Succession」, *Directors' Breakfast Series,1998.*
<http://www.spencerstuart.com>

Towers Perrin, 「An Overview of Executive Compensation Plan in Banking Industry」,
January 2000.

【Internet Website】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뱅크21세기 : <http://www.banktown.com>

스톡피아 : <http://www.stockpia.com>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한국은행 : <http://www.bok.or.kr>